

지역연구의 동향과 전망¹⁾

김 영 정 (전북대 사회학과)

1. 서 론

사회학의 분과영역 중 지역연구를 이끌어 온 전통적인 분야는 ‘도시 및 농촌사회학’이다. 이들의 성립근거는 ‘산업사회의 도래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 농촌(도시)지역과는 분명하게 대비되는 도시(농촌)지역의 독특한 사회현상의 일상화와 확장’에 있었다. 인간생태학(human ecology)에 기반을 둔 이들 분과학문의 주된 관심은 지역사회 내의 다층적인 사회적 변화를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인구변동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것이었다.

본래 인간생태학은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이 자신의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가를 밝히고자 한 분과 학문 영역이다. 인간의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은 개인적 차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발달된 다기화된 사회조직(생계, 직업, 일상조직 등)의 차원에서 완성된다. 따라서 적응은 집합적 산물이며, 그것을 설명하려는 인간생태학의 주된 관심은 개인들의 집합체인 지역사회의 특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데로 모아졌다(김영정, 1993).

해방 이후 거의 한 세대 동안 한국사회학계의 지역연구는 인간생태학적 관점에 기초한 농촌 및 도시사회학이 주도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이후 전개된 강압적 사회분위기는 ‘자유경쟁과 자율적 조종 메카니즘에 근거하여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인간생태학의 기본 가설이 더 이상 지지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그 결과 일부 젊은 사회학자들은 지역연구에 대한 ‘새로운’ 이론 탐색을 시도했고, 그들이 도달한 종착점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의 지역이론이었다.

기존의 인간생태학적 관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관점에 기초하여 당대의 지역문제를 구체적인 연구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시기는 독재정권이 물러가고 전체 사회가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1990년대 초반이다. 강압적 정권의 퇴진과 형식적 민주화의 달성이 새로운 관점의 지역연구를 활성화시킨 계기가 되었던 셈이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원인(原因)이 있었다. (가)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 실시(1991년)와 그에 따른 지방시민사회의 성장에 대한 기대, (나) 김영삼 정부가 내세웠던 <세계화> 담론(1993년)에 대한 조응 논리로서의 <지방화> 담론 확산, 그리고 (다) 특히 지방(대학) 젊은 사회학자들의 관심과 의지가 결집된 金海結社(1993년)²⁾를 통한 <지역사회학회> 탄생이 그것이었다. 말하자

1) 이 글은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창립 20주년 기념 지역사회학회 대회(2002년4월26일-27일, 경남대) 발표문을 보완한 논문(‘한국 지역사회학의 성립과 발전’, <지역사회학> 제4권1호, pp.5-18)을 기반으로 이후 10년 넘게 주로 <지역사회학>에 게재된 지역 관련 논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를 확장한 것임을 밝힘.

2) 金海結社란 1993년 10월 10일 밤 김해 신어산 동림사 선방에서 열렸던 지방 사회학자들의 모임을 이른다. 인제대학교 강신표 교수 초청 모임으로 김성국, 김두식, 설광석, 이은진, 김종덕, 김영정, 성경룡, 최태룡, 박재목, 조주현, 최협, 이종오, 김석훈, 김석준(부산대), 박형준, 이재열 등이 참여했다. 그들은 사회학자로서의 자신들의 위상과 자세를 허심탄회하게 고백하고 지역연구의 미래의 방향과 주제 등에 대해 토론했다(강신표,

면 이들 세 가지 사건이 한국의 지역연구를 새롭게 태동시킨 촉진제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김영정, 2002).

본 논문은 1990년 초반 이후 붓물처럼 터져 나온 ‘새로운’ 지역연구의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의당 지난 20여 년 동안 출간된 관련 연구업적 모두를 분석 텍스트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렇듯 지난한 작업을 감내해 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필자는 편의상 1993년 지역사회학회가 출범된 이후 매년 2회씩 개최되었던 정기 학술대회의 자료집에 실렸던 논문과 1998년 창간된 공식 학회지 <지역사회학>에 실린 논문을 기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사실 <지역사회학>이외의 다른 사회학 저널(특히 농촌사회학회지 등)에 게재된 실적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부적절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의 근본 목적이 추세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자들의 그동안의 업적을 가장 광범위하게 소개해 왔던 공식 학회지 게재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고 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역량과 주의력의 부족으로 상당수 의미있는 연구업적의 내용이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며, 또한 검토 대상의 범위를 90년대 초반 이후의 업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그 이전의 성과에 대한 리뷰가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기 때문임을 밝힌다.³⁾

2. 분석틀 : 지역연구의 분류 및 범위 설정

지역사회학적 연구의 대상, 범위, 그리고 학문적 정체성 등에 대해 한 번쯤 고심해 본 적이 있는 학자들에게 이은진의 다음 지적은 깊은 위안을 준다.

“지역(사회)연구는 사회학계에서 그 연구분야의 정체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특한 이론과 독특한 방법론을 지닌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지역사회학이란 말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사회학의 연구대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되어 나타난다. 1950년대 공장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산업사회학이 성립되었듯이” (이은진, 1999: 105)

그의 설명은 원칙적으로 옳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학의 연구영역으로 다루어져 온 ‘물리적 경계를 지닌 삶의 현장으로서의 특정한 지리적 장소(place)’를 지칭하는 세 가지 개념들 - ‘지역(region)’, ‘지방(local)’, 그리고 ‘공간(space)’ - 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상적인 용어로 쓰일 때 상호 호환 가능한 이 개념들이 학술적 용어로 쓰일 경우에는 각기 상이한 관점과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9, 16 ; 이은진, 1999, 254). 이 모임을 계기로 <지역사회학회>가 창립되었고, 강신표는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보다 앞서 1989년 가을, 지리산에서 영호남 사회학자들이 비슷한 목적으로 모인 바 있다. 그러나 이 모임 이후 어떠한 집단적 추수조치도 뒤따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金海結社를 <지역사회학회> 탄생의 원동력으로 본다.

- 3) 전통적인 지역연구에 대한 리뷰는 해방 이후 농촌사회학의 동향을 살핀 왕인근(1984)의 연구와 60년대 중반 이후 약 20년 동안의 도시사회학 동향을 살핀 권태환(1984)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또한 해방이후 지연간 불균등발전과 지역갈등의 전개를 연구사와 쟁점을 중심으로 살핀 정근식·이준식(1995)의 논문과 지역사회학의 역사와 사회학 연구에서 지역의 위치를 검토한 이은진(1999, 2009)의 논문은 그동안의 ‘새로운’ 지역연구의 초기 동향을 살핀 의미있는 글이다. 필자가 다루지 않은 1990년대 이전의 동향은 이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통상 ‘지역(region)’이라는 개념은 ‘지리적으로 위치 지워진 사회적 활동의 물리적 장’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갖는다. ‘지역’을 이런 뜻으로 사용할 때 사회학의 전통적인 연구영역인 ‘지역사회’ 연구는 사회활동의 장으로 물리적 경계(한계)를 지니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뜻한다. 반면 ‘지방(local)’은 ‘중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앙)권력이 행사되는 장소를 이른다. 따라서 ‘지방’은 중립적 개념인 ‘지역’과는 대비되는 (피)권력의 속성을 내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이은진, 1999b: 106).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방’의 현실을 다루는 경우라도, 그것을 ‘지방’문제라고 개념화하지 않고, ‘지역’문제라고 개념화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향은 그동안 지역연구의 대부분을 지방(대학)의 사회학자들이 주도해온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거주 ‘지역’이 바로 ‘지방’이었기 때문에 두 용어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해도 별다른 혼란을 주지 않고, 가치중립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혹시라도 불러올 수 있는 ‘연고(장소) 귀속적인 오해’를 불식시켜 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그러한 관행이 굳어진 것은 아닐까 싶다. 양자를 상호 호환 가능한 용어로 사용하는 관행은, 다음을 참고하면, 학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용납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region은 본래 물리적인 것을 일컫지만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행정구역, 다시 말해 커다란 정치단위의 일부를 일컫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국민국가가 힘을 얻게 되면서 ‘region’은 커다란 정치단위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그에 예측되어 있는 지역을 일컫는 의미도 갖게 됐다”(김성기 외 역, 2010: 403)

이럴 경우 ‘region’= ‘local’이 성립한다. 그러나 ‘region’과 ‘local’이 정책개념으로 사용될 때, 양자는 해당 정책의 공간적 적용 범위는 물론 정책이 추구하는 이념적 정향의 차이까지를 함축하는 명확히 다른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특히 영국의 경우 ‘region’은 ‘광역의 행정·경제·환경·복지정책 등이 구현되는 단위(대지역 또는 광역)’를 뜻하는 물리적 장소 개념으로, ‘local’은 그보다 규모가 작은 공간적 정책 단위(소지역)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지역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졌던 영국에서 역대 정부의 공간정책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개념으로 양자는 뚜렷한 의미 차이를 가진다. 역사적으로 보수당이 집권할 경우 중앙정부는 대체로 local, 즉 소지역 단위의 지역정책을 추구하며(이를 localism<소지역주의>라고 함), 노동당이 집권한 시기에는 region, 즉 광역 단위의 지역정책이 추진되는 관행(이를 regionalism<대지역주의>라고 함)이 확립되어 있다. 보수당이 localism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회정책의 근간 이념으로 시장에 기초한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며, 지역적으로 잉글랜드 남부 농촌지역의 지지를 받아 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 실패의 가능성과 그에 대한 정부의 교정을 사회정책 이념의 근본으로 삼고 있고, 대도시 지역의 노동자와 서민들의 지지를 받아온 노동당이 regionalism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정준호, 2013). 2010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자유당과 연정)이, 직전 노동당 정부가 자신들의 핵심 가치로 숭상했던 regionalism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적 기구로 설립했던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 광역지역개발청)를 해체하고 임의 기구인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s/소지역사업파트너십)를 설립한 것은 그들의 이념인 localism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역’ 및 ‘지방’과 더불어 지역연구의 또 다른 대상으로 부상한 ‘공간(space)’이라는 개념은 정치경제학적 지역연구의 관점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공동체적 생활양식은 물론 자본주의적 법칙이 창출되고 구현되는 -때로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영역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공간의 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공간사회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자는 르페브르(H.Lefebvre)이다. 공간의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는 공간구성의 기본 요건으로 <공간의 표현(representations of space)>, <구현된 공간(representational space)>,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 등 세 요인을 들고 있다. <공간의 표현>은 도시 학자, 도시계획가, 건축가 등의 도시전문가들에 의해 개념화된 공간(conceived space)를 의미하고, <구현된 공간>은 실제 우리가 체험하는 물리적 공간(lived space)를 의미한다. <공간적 실천>은 공동체 참여자들의 행태와 삶의 양식을 규정하고 창출하는 생산적 공간(productive space)을 의미한다. 그는 공동체 성원의 생활양식은 물론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나 정치권력까지도 <공간적 실천>을 통해 창출되는 것으로 보았다(진양교, 1998: 14 재인용). 하비(D.Harvey)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의 <공간적 실천>을 통해 창출되는 대표적인 법칙의 예가 ‘불균등한 지리적 발전’이다(이은진, 1999: 108 재인용).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할 때, 크게 보아 ‘지역연구’는 일정한 범위의 지리적 장소(place)의 문제를 (1)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region 연구’, (2) 중앙과의 비대칭적 권력관계에 기초하여 문제를 바라보는 ‘local 연구’, (3) 정치경제학적 공간이론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space 연구’ 등 세 가지 형태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지역 문제를 바라보는 연구자의 관점과 이론적 지향의 차이를 반영한 분류체계이다. 이 프레임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학계의 지역연구 성과물들을 분류해 본다면, (가) 인간생태학적 관점에서 도시 및 농촌문제를 다룬 초창기의 도시/농촌사회학적 성과물은 ‘region 연구’의 범주에 속하며, (나) 특히 1990년 초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터져 나온 전국 방방곡곡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제반 문제를 대내외적 권력의 비대칭적 관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구실적물들은 ‘local 연구’의 부류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다) ‘region’의 문제이건 ‘local’의 문제이건 주제의 종류와 범주에 관계없이 해당 문제들이 (한국 및 세계)자본주의 발전과정에 배태된 계급 및 권력블럭의 (모순적)산물이라고 보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에 근거한 연구들은 모두 ‘space 연구’에 귀속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3. 연구동향

1) 관심과 관점의 변화

지역사회학회 태동 이후 축적된 새로운 지역연구의 성과는 양적으로 놀랍다. 그동안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사회학> 게재 논문과 정기 학술 대회 때 다루어진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1>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역연구의 3가지 범주 유형을 기준으로 지역사회학자들의 관심 주제를 분류한 것이지만, 경계의 구분이 모호한 분야가 적지 않다. 특정한 주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다중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local 연구’ 영역과 ‘space 연구’의 그것과는 구분이 쉽지 않다. ‘local 연구’의 기본 가설이 ‘space’ 연구가 지향하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의 일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중앙-지방의 위계적 관계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을 일단 'local 연구'로 분류했고, 국가-계급-시민사회의 관계의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을 'space 연구' 영역으로 귀속시켰다. 그리고 특히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지역정책 관련 연구들을 양자의 경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정책연구는 속성상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1> 지역연구의 유형 및 주제

내용 유형	연구주제(내용)	
(1) 'Region' 연구 - '지역'사회학적 관점-	근린 공동체/ 삶의 질/ 산업화와 도농문제/ 도시 종주성/ 자원봉사/ 정보화와 정보격차/ 지역 시민사회와 NGO/ 사회자본/ 다문화 가족/ 외국인노동자/ 로컬 푸드/ 생협운동	이론과 방법론/ 지역사/ 연구 동향/ 지역학자 역할/ 한류/ 해외지역 연구
	지역감정/ 지역 정체성/ 지방선거 및 투표성향/ 지역문화	
(2) 'Local' 연구 - '지방'사회학적 관점-	중앙집권/ 지방분산/ 지방분권/ 도시정치/ 지방정치와 지방행정/ 자립적 지방화 수도권 성장 및 규제(완화) 혁신클러스터/ 산업지구/ 기업도시	
	지역격차/지방화 논쟁/ 낙후성과 특성화 발전/ 지역(마을, 도시, 농촌희망, 문화유산)만들기/	
(3) 'Space' 연구 - '공간'사회학적 관점-	불균등 발전/ 균형발전/ 지역혁신체계/ 지역 거버넌스/ 지역 레짐/ 지속가능 발전/ 도시재생(재개발)/ 지역 여성/지역 노동/ 환경문제와 환경정치	

주) 지난 20년(1993-2013년)간 <지역사회학> 게재 논문들의 연구주제를 유형화한 것임

<표1>로부터, 지난 20년간의 지역연구 동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미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전통적인 지역연구 분야인 'region' 연구 영역의 주제가 전통적인 농촌/도시사회학의 관심 영역을 넘어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것은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 변화의 큰 흐름을 반영하는 정보화⁴⁾, 시민사회⁵⁾, 다문화⁶⁾, 외국인노동자⁷⁾ 사회자본⁸⁾, 자원봉사⁹⁾, 먹거리 및 로컬푸드¹⁰⁾, 생활공동체운동¹¹⁾ 등 문제들이 지

4) 김원동(2000), 장원호,(2000), 이시화(2000), 조주은(2003, 2004) 등 참조

5) 김종덕(2003), 김영정(2004), 이해진(2008), 이수철(2011), 유팔무(2011), 강희경(2011), 정택석(2013) 등을 참조

6) 설동훈(2002, 2006), 설동훈 외(2011), 염미경(2008) 등 참조

역차원에서 논의되고, 분석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당위적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자의 관심이 'region 연구 관점'에서 'local 및 space 연구 관점'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 지방자치가 도입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제도 정착이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하고 모순적인 현장을 매일 목도하고 있는 지방학자들에게 그 실상을 고발하고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과 프레임이 필요했던 현실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특히 후자에 근거한 규범적 연구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지방이 세워준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조롱받았던 참여정부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고, 뒤이어 MB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까지도 주요 국정과제로 다룰 수밖에 없는 지방 대 중앙의 대결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정책 친화적 관점이 활황을 누렸던 덕분이다. 정책연구의 호황기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연구자들의 시각이 인구학적-인간생태학적 관점으로부터 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 크게 이동하는 패러다임의 이동현상(paradigm shift)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다.

정치경제학적 패러다임은 다양한 지류이론을 갖고 있다. 자본순환이론, 집합적 소비이론, 네오-베버리안 이론, 구조주의 맑시스트 시각, 네오-리카르디안의 시각, 공간노동이론(labour theory of location), 사회적 공간관계분석의 시각 등이 그것이다.¹²⁾ 하지만 이들의 지역문제(특히 공간조직)에 대한 접근방식은 각각 상이하다. 예컨대, 네오-리카르디안과 공간노동이론은 지역내부의 사회공간적 관계를 자본과 노동력의 필연적 결합의 산물로 파악하며, 자본순환이론은 지역공간의 물리적 특성이 자본의 순환과정 중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더불어 집합적 소비수단이론과 구조주의 맑시스트들은 지역공간의 변동과 발전이 집합적 소비수단의 재생산 과정과 국가-자본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또한 사회공간관계분석의 시각은 생산력과 생산관계,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국가관리의 행동, 그리고 공간배열(spacial configuration -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회적 활동의 양태와 위치)이라 불리는 사회공간관계의 분석이 지역발전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첩경이라고 주장한다((Gottdiener and Feagin, 1988)

이들 중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것은 구조주의 맑시즘이었다. 이는 지역문제를 포함한 모든 자본주의 사회문제가 궁극적으로는 국가권력과 계급의 영향에 의하여 창출되고 변화한다고 본다. 이 주장은 '모든 국가의 시책과 사회정책의 결과는 항상 친자본주의적(the pro-capitalist outcomes of the state policies)'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김영정, 2002; 9). 이러한 주장을 과감하게 받아들인 젊은 사회학자들은,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지역정책은 항상 자본가와 기득권층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입안되고 추진된다고 보기 때문에

7) 설동훈(2003a, 2003b, 2013), 설동훈 외(2004), 김철효 외(2006), 임경택 외(2006) 등 참조

8) 이재열(2003, 2006), 김명아(2003), 이에란 외(2004), 정동일 외(2010), 김영범 외(2010) 등 참조

9) 노병일 외(2003) 등 참조

10) 김종덕(2002, 2008, 2010), 이해진 외(2012), 김철규 외(2012) 등 참조

11) 김종덕(2009), 김홍주 외(2013) 등 참조

12)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경제학적 시각으로 통칭되어 왔다.

(1)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서로 적대되는 사회관계(antagonistic social relationships)에 의하여 지배된다. 따라서 사회는 외부영향에 의하여 변화하는 생물학적 단일 공동체가 아니라 내재적 모순, 균열, 그리고 불균등 발전- 이것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그 자체의 논리로부터 나타난 현상들임 - 등을 그 특성으로 하는 고도로 분화되어있는 총화된 조직형태이다. (2) 사회발전은 적대적 소유관계를 갖는 사회 내부의 모순을 반영한다. 발전의 모순과 성장의 격차(inequities)는 적대감정을 유발시키고, 정치활동의 성격을 규정한다. (3) 권력의 불평등은 사회관계의 기본적인 요인이며, 권력의 행사가 사회발전의 결정요인의 하나이다. (4) 모든 사회분석은 과거의 역사 또는 세계적 맥락을 준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사회분석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Gottdiener and Feagin, 1988, 174).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많은 부분에서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지역문제를 바라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한국의 지역문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문제를 ‘계급, 자본, 역사, 체제, 구조의 문제로 돌아가서 보아야한다’(정근식·이준식, 1995)¹³⁾고 강제하는 이 관점은, 분명 옳은 지적이기는 하나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반증 가능성도 없어 이론적 자기 위상이 허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2) 실천적 연구의 폭발

1990년대 초반, 지방문제와 관련하여 사회학자들이 맨 처음 관심을 보인 연구주제는 지방자치와 자립적 지방화의 가능성 문제였다. 비록 단체장 선거가 유보된 미완의 상태로 출발하긴 했지만, 1991년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는 해방 이후 심화된 중앙집권의 파행과 정치적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전체 사회의 민주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이룩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물론 제도 시행과 더불어 중앙집권과 권위주의가 바로 청산되고, 자립적 지방화가 단시간 내에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지방자치의 부활이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최초의 지역사회학적 연구의 성과물은 <춘천리포트>(1991년)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춘천 시민의 생활 전반에 관한 일반 조사(general survey)와 춘천시에 존재하는 자발적 결사체(중간집단)들의 조직구성, 활동 연결망구조 등을 조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와 정치구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그러한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연구목적의 하나였다. <춘천리포트>는 연구진들이 기대했던바 그대로 한국의 <Middle Town>연구로 평가받기에 충분했고, 이후 제주, 원주, 성남, 부천연구 등 구체적 지역사례연구들을 추동했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심화된 지역 간 불균등발전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책을 찾으려는 규범적 연구를 촉발시켰다. 이를 간과하고는 지방자치의 최종 목표인 자립적 지방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이 문제는 지역 간 정치적 대립구조와 맞물린 채 우리사회 전체를 수십 년 동안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영/호남의 대립구도를 넘어 그 전선은 수도권/비수도권간의 대립으로 확장되었다.

정치적 부담을 느낀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출범과 더불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중요한 정책과제(수도권 정비사업, 거점개발 중심의 지역발전전략, 정주생활권 개발 중심의 지역발전전략, 서해안개발사업계획 등)로 다루었고, 이를 최고의 국정과제로 다룬 것은 참여정부이다(성경룡, 2013).¹⁴⁾ 참여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은 국가의 간섭과 조정에 의한 지방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업으로 수도권 성장관리,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역혁신체계구축, 신활력사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이 추진되었고, 이들 정책과 연관 있는 직간접 사업들을 소개, 분석, 평가하는 많은 연구들이 출현했다. 성경룡(2013), 성경

13) 정근식과 이준식(1995)의 논문은 1987-1990년 초반 사이에 사회학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지역문제(지역감정, 지역격차, 불균등발전 등)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수주의적 시각, 자유주의적 시각, 그리고 급진적 시각으로 나누어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14)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평가는 성경룡(2013)을 참고할 것.

룡·박준식(2013), 정동일·성경룡(2010), 박준식·정동일·성경룡(2009), 김영정(2008, 2011), 염미경(2005, 2010, 2011), 김홍주(2011), 김태란 외(2009), 이은진(2006), 이기홍(2005)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또한 자립적 지방화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는 이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위한 제도적 조건으로 중앙으로부터의 권력, 권한, 재정의 독립을 가능하게 해 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조치들이 강구되었고, 이와 관련된 연구(김영정, 2011)도 나타났다. 참여정부의 전략은 ‘60년대 이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에 근거한 지방화 전략이 수립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진보적인 학자들의 주장에 기초한 것이었다.¹⁵⁾

이와 같은 실천적 연구뿐만 아니라 90년대 전후에 쏟아졌던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밝혀낸 지역감정 및 지역격차의 추세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는가의 여부, 그리고 그 추세와 특성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연구도 발표됐다(박준식·김영범, 2013; 이강익, 2011). 특히 김영정(2009)은 신산업 분야의 특화육성을 핵심내용으로 삼고 있는 국가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이 본 궤도에 오른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격차가 더욱 심화되었음을 밝힌 바 있고, 2000년대 이후 지역성장 격차의 유발요인은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신산업 부문의 지역간 배열의 차이라는 사실과 그러한 차이(즉 발전경로의 지역별차이)가 갈수록 공고화되면서 앞으로도 지역격차 문제가 해소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성찰과 전망

‘지역’은 삶의 역사적 현장이자 문화표출의 장(場)이며, 경제적 생산현장이자 사회발전의 공간적 기본단위이다. 또한 지역은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권력의 체계이고, 누가 누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영향력을 주고받는지를 보여주는 의사소통과 관계망의 체계이다. 따라서 지역은 권력과 저항, 가치와 몰가치, 신념과 배신, 호의와 질투 등이 아로새겨진 텍스트이다. ‘지역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여러 층위들과 그것들의 구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그려내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적·규범적 연구에 치우쳐있었던 지난 20년간 연구들은 이점에 충실하지 못했다. 이점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지역’현실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의 한계 때문에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5) 그러나 참여정부가 물러가고 MB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균형발전정책은 철저히 비판 받았다.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포퓰리즘적 정책, 수도권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下之下策, 지역 및 국가발전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저급의 실책, 국가재원을 1/n씩 나눠먹자는 부도덕한 정책, 선진국에서 이미 폐기된 시대착오적인 정책, 전국의 땅값만 높여 논 한심한 정책,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쫓는 미망(迷妄)의 정책’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비판이 쏟아 졌다. 이것들은 보수언론, 정치인, 학자 등 보수적인 ‘중앙집중의 수혜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균형발전정책은 뒤 돌아 볼 여유를 허용치 않은 채 앞만 보고 돌진한 ‘조국 근대화’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탈진해 버린 ‘지방을 살리자’는 운동의 차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진보적인 지방학자들은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절대빈곤 시기에 농촌을 해방시켰던 ‘새마을 운동’처럼, 고도성장의 폐해로 부터 자력갱생을 위한 어떠한 기술도, 재원도, 인력도, 기업도 존재하지 않은 텅 빈 지방에 발전의 기초여건(자립적 지방화의 기본조건)을 마련하고, 지역 간의 삶의 질 격차를 개선(national minimum)하기 위한 국민운동의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궁극적으로 각 지방을 개성있는 지역으로 키워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와 중앙정부의 의무라고 진보주의자들은 주장한다(김영정, 2011).

1) 지역 및 지역연구의 정체성 문제

한국의 ‘지역연구가 독립적 분과 학문영역으로서 정립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이은진, 2009).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사회학의 성립이 ‘농촌과 구별되는 도시’의 출현에 근거했듯이, ‘특정의 지역’과 구별되는 ‘또 다른 지역’이 확인되거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광역화, 이동과 교류의 일상화, 그리고 비슷한 생활양식의 공간적 확산 등으로 지역의 정체성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본래 지역(성)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논의되던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변했다. 커뮤니케이션의 물리적 근접성과 빈번함은 (특히 정보화 영향의 결과)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박창호 역, 2011: 177).

지역의 실증은 지역연구 자체를 미망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단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인정되고, 확인될 뿐, 그 밖의 지방과 지방, 농촌과 농촌,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의 차이가 경험적으로 두드러지게 확인되질 않는다. 삶의 물리적 환경과 경관마저도 급속히 동형화되고 있다. 그동안의 지역 관련 연구에서 ‘지역’이 변수로 채택된 연구가 거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¹⁶⁾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낙후(농촌)지역 간의 발전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려 했던 정동일·성경룡(2009)의 연구이다. 이 연구는 낙후지역 20개 군(郡)을 대상으로 ‘그룹 지니어스(group genius)’의 창출 목적으로 실시한 정부사업(신활력사업)이 지역발전의 성과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당 ‘신활력사업이 착수된 이후 대상 지역의 (계량적) 발전성과’를 종속변인으로 삼고, ‘그룹 지니어스’의 과정이 그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분석단위의 일치를 위해 독립변수 역시 사업대상 지역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동질화된 농촌지역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막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지역주민들(응답자들)의 ‘개인’ 의식을 종속변수로 삼는 설득력이 높지 않은 우회적 연구모형을 채택했다. 지역연구에서 ‘지역’을 분석단위로 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를 이 연구는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동안 ‘지역’을 변수로 활용하여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얻은 경우는 ‘선거와 투표행태’ 연구가 거의 유일한 것 같다.

이러한 문제점을 넘어 지역연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길의 하나는 지역 내부문제에 시야를 좁혀 ‘현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미 이와 관련된 괄목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 이후 지역내부의 정치, 권력, 시민사회 문제 등에 맞춰 사례연구를 진행한 한상진(1999), 강희경과 민경희(1998), 염미경(2000), 백두주(2001), 이해진(2010), 강희경(2011), 장세훈(2012), 윤일성(2012)의 업적 등이 그것이다. 한상진의 연구(1999)는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와 지방정치에 대해 살핀 것이다. 성남시에 존재하는 지배집단(지방정부 자문단체, 체제수호단체 등)과 중간집단(이익, 친목, 봉사단체), 그리고 하층계급(노동자, 도시빈민)들의 지방정치에의 참여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지역의 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구성 경로 연구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강희경과 민경희의 연구(1998)는 청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권력회로를 추적하고, 권력자원의 이용방법과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대 반성장연합의 문제를 파헤쳐 내는 분석틀과 토대를 만든 연구로 평가된다.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울산과 포항의 정치적 관계를 비교분석한 박재욱(1996)은 대기업의 지역

16) 이은진(2009)도 지역의 독립변수로서의 취약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헤게모니가 선거정치를 통해 어떻게 표출되며, 지역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등장하는 반성장연합에 의해 어떻게 제한을 받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염미경(2000)의 연구는 일본 미이라쿠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에 개입되는 지역주체들 간의 상호역학관계를 분석한 것이며, 백두주(2001)의 연구는 삼성자동차 부산유치 및 매각과정을 성장정치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괄목할만한 논문이다. 지역주민과 주민운동이 주도하는 지역개발에 주목하고 있는 이해진(2007)은 지역개발 정치과정을 구조, 행위주체의 상호작용, 전략의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그 역동적 과정을 분석한다. 즉 지역개발정치의 구조와 동학을 주민운동의 역할 및 그 변화과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강희경(2011)은 청주시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건설사업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내부 사례의 분석을 통해 ‘강한 시장(強市長)’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우리나라 도시정치의 현실에 서구의 도시정치이론들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엄중하게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 불량주책 재개발의 사례와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정치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는 장세훈(2012)과 윤일성(2012)의 논문도 이 분야의 괄목할만한 업적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방법론적 편협성의 함정에 빠져있는 사회학적 지역연구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선구적인 훌륭한 업적이다.

2) 지방자치 연구 문제

우리와 같이 좁은 단방향 국가에서 각각의 지역이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하여 고유의 정체성을 갖추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이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일을 가능토록 만들기 보기 위해 국가가 도입한 장치가 지방자치제도이다.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지역 정체성 형성을 결정 짓는 절대 요인은 아니다. 그러나 필요조건인 것만은 확실하다. 실천적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 연구가 지역연구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1990년 초반 이후 연구동향에서 그러한 추세가 확인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방자치 공고화와 그것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 확실하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역연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빠른 경로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현재 지방자치의 실상과 관련 연구의 실태는 어떠한가?

지방자치의 최종 목표는 국가통치체제의 분권적 전환을 통한 ‘특화된 지역발전’을 구현하고, ‘주민 거버넌스 모형(citizen governance model)의 주민자치 구현을 통한 지역사회의 연대적 공존, 생활 민주주의의 일상화, 그리고 특성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도입의 성년을 바로 넘어선 현재, 우리는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한 정상궤도에 진입하기는 한 것인가?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인가? 아예, 궤도를 이탈한 채 붕괴 직전의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인가?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렇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드물다. 현재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모순의 실태와 원인을 연구/진단하고, 조정과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연구가 어렵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은 장기간의 중앙집권적-관료적-개발독재체제하에서 자립의 동력과 자원을 모두 소진해 버린 지방사회에 “프라이비티즘(privatism)¹⁷⁾이라 개념화

17) ‘자치 패러독스’ 현상은 지방자치제도가 몰고 온 “프라이비티즘(privatism)”의 확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본래 워너(Warner, 1968:3-4)에 의해 제시된 이 개념은 개인화된 미국의 도시사회에서 공공행정이 추구해야 할 방향(public purpose)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가치 정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주의와 시장자본주의 전통에 길들여진 미국의 도시주민들은 행복의 근원을 ‘불간섭주의(personal independence)’과 ‘부의

되는 ‘개인과 패거리의 이익중심주의’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Kweit, R.W and M.G. Kweit, 1990; 14, 28). 연대와 공익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 자율과 책임을 전제 한 자치주의, 복지와 환경을 중시하는 생태주의적 발전관에 대한 어떠한 학습도 훈련도 받아 보지 못했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도입된 지방자치제도는 독재체제에 오랫동안 억눌려있었던 주민들의 잠재적 ‘프라이비티즘’을 일시적으로 폭발시킨 도화선이 되었다. 지역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지역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모순된 결과를 가져 왔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을 필자는 ‘자치의 패러독스’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제도 도입의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 도입 이후의 정책자원의 생산과 분배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제도 도입과 더불어 변화된 지역주민들의 정체성의 혼돈이 그러한 현상을 보다 심화시켰다.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 지방자치를 반납하고 중앙집권체제로 회귀해야 한다면, 소규모 자치단위를 광역단위로 통합하여 통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신도철, 2010; 김성배, 2008 참고).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자치 패러독스’의 산물이다. 다행히도 제도 도입 이후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 내부문제에 대한 분석적 사례 연구들이 축적되어 가면서 이들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 앞서 소개한 한상진(1999), 이해진(2010), 강희경(2011), 장세훈(2012), 윤일성(2012) 등이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3) 정책관련 연구 문제

앞서 밝힌 것처럼 지난 20여 년 동안은 정책관련 연구의 호황기였다. 이를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크게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모든 정책은 당대의 필요성에 따라 출몰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연구의제로 부각되는 것은 당연하다. 참여정부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거듭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 동안 가장 많은 관련 연구물을 쏟아 냈던 주제가 지역불균등성장 논쟁, 지방화 정책방향 논쟁, 그리고 지방분권 논쟁 등의 문제였다.¹⁸⁾ 격심한 지역 간 발전격차, 수도권과의 비대, 지방의 공동화(지방재정, 대학, 인력, 기업, 문화의 사막화) 등의 이슈가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정치적 쟁점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이들 논쟁은 의당 소멸되고 관련 연구는 잠잠해 질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 최대의 갈등 이슈가 ‘지방 공동화’와 ‘지역 간 성장격차’, 그리고 ‘왜곡된 지방분권’ 문제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문제에 대한 연구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4만 불을 넘나들 즈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때 이들 문제에 대한 정책과 연구의 가치는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 그 시대에도 지역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국민적인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이슈

추구(search for wealth)’에서 찾는다. 따라서 공공행정의 목표는,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맞추어져야 하며, 지역의 정치는 주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너는 이러한 주민들의 성향을 “프라이비티즘”으로 개념화했다.

지방자치제도의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도시 사회의 경우 이것이 타인의 행동에 대한 ‘불간섭주의’와 더불어 나타나기 때문에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외현화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역사회는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행하는 개인과 패거리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를 제어할 문화적 자산도, 정제된 도덕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갈등과 소란은 깊어가고 있다고 필자는 본다.

18) 아래 내용은 김영정(2011, pp.219-220)에서 재인용.

가 국정의 아젠다로 떠오를 리 없다. 실제 국민소득 4만 불이 넘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지역 불균등발전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다루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화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학자들은 한번 쯤 ‘지방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의 관점’, 그리고 ‘시장과 성장 중심의 논리’로 지방 문제를 바라볼 때 논쟁의 종결점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수도권 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만큼이나, ‘전국토의 자원화 정책’도 중요하다. 스웨덴은 1 km² 내에 단지 한 사람 밖에 살고 있는 얇은 오지 중의 오지도 결코 정책적으로 버리지 않는다(김영정, 2000. 17). EU의 지역정책은 낙후도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고 순위가 낮은 지역에 구조기금(structural fund)을 가장 지원하는 원칙(Objective 1, 2, 3 사업 등)을 지켜오고 있고, 부자 회원국들도 그 원칙을 존중한다(김영정 외, 2007. 38-47). ‘시장 없는 사막(지방)’에 ‘특색 있는 시장’을 조성하여 ‘특색 있는 성장과 자치’를 이루는데 국가의 조정의지와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연구는 (공공)사회학의 임무 중 하나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논란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전폭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입장을 보이지만 분권의 단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운다. 보수주의자들은 초광역자치제도를 도입(예컨대, 인구 천만 명 단위의 4대 초광역단체와 100개 기초단체로의 개편)할 것을 주장한다. 영국의 보수당이 소지역주의(localism)를 지방화 정책의 근간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참 대조적이다. 초광역 자치체제가 구축되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전폭적으로 이전될 경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규제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될 ‘서울 및 수도권 광역정부’는 보수정치인들이 주장해 온 ‘대수도론’을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도권은 보수정권의 통치 거점으로 공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일극 중심의 초집중화는 더 심화되고, 지방과의 발전격차는 더 벌어진다. 보다 근본적 문제점은 보수주의자들이 ‘현재의 기초지자체를 통폐합’을 거침없이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김성태, 2007). 이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해치는 일이다. 지방자치의 최종목표는 ‘자치의 공고화와 실질 민주주의 달성’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까지(준)자치제를 실시하여 ‘동네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자치단체 세분화를 통해 동네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있다.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는 이유로 현재의 기초단체를 통폐합하거나, 광역화하자는 방안은 목표와 수단이 전치된 하책(下策)일 수 있다(김영정, 2011).

그러나 자치권역의 범위, 특히 광역자치권역의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 학자들 사이에서도 주장이 갈린다. 수도권 일극 지배체제와 수도권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초광역경제권 및 연방체제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 초광역정부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성경룡, 2013)이 있는가 하면, 초광역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영국의 진보정권이 채택한 RDA 제도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여 ‘광역적 생활권’ 내부에서 지자체간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지역간 합동개발, 공간계획, 경제정책, 기술과 고용, 교통, 관광, 폐기물, 환경, 생물다양성 보호 등)를 협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라고 주장(김영정, 2011)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정책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미래의 지역발전을 결정하는 엄중한 실천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4) 국가(중앙)-지방의 관계 19)

정책적-규범적 지역연구의 최종적인 관심은 <어떻게 하면 지역의 자생적-내생적 발전(자립적 지방화)이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보적 학자들은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대로 국가가 자립적 지방화의 기반을 만들어 주면 지방(지역)의 내생적 발전은 실제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회의적 논의들이 만만치 않다. 설령 국가의 정책에 힘 입어 내생적 지역발전의 기반이 완비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발전은 어쩔 수없이 중국적으로는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용숙, 2003; 152-153). 사실 어느 세력이 정권을 잡던 중앙-지방의 비대칭적 권력관계를 해체하는 것은 가능치도 않고, 타당치도 않기 때문에 회의론이 갖는 의미는 크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회의론은 미래의 국가-지방관계가 지향해야 할 이념적 좌표가 무엇이며, 미래의 지방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지향해야 할 이념적 정향이 무엇인지를 지역연구자들이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사회학적 지역연구가 ‘지방’ 발전에 대한 정책적-규범적 연구를 외면할 수 없다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장기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는 <신국가주의적 국가-지방관계>의 정립과 그에 기초한 지방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신국가주의(neo-statism)는 기존의 ‘발전국가론’과 최근의 ‘신자유주의적 발전론’을 모두 넘어선 이론적 정향으로 ‘지방을 지배하는 강한 국가’와 ‘탈국가규제를 근거로 성립하는 강한 지방’ 모두 장기적인 사회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질 못한다고 암시한다. 대신 국가와 지방은 경쟁적 협력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를 보장해 주는 강화된 시민사회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래 신국가주의 이론은 Weiss와 Hobson(1995: 169-170)이 선진국의 새로운 국가-시장의 관계가 지향해야 할 바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국가에 의해) 조정된 시장과의 상호의존성(governed interdependence)”이 존재할 때 새로운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특히 일본의 국가-시장 관계에 존재하는 “협조적 긴장의 쌍방관계”(two-way cooperative tension)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들이 주조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신국가주의는 ‘강한 국가’를 전제로 성립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국가주의는 과거의 ‘발전국가론’과 외견상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질은 상이하다. 발전국가론이 주장하는 ‘강한 국가’는 독점적, 강제적, 권위주의적 권력을 소유한 국가를 의미하지만, 신국가주의가 상정하는 ‘강한 국가’는 국가-시장의 상호협력관계에 의해서 강화된 ‘협상적’ 하부구조 권력(infrastructural power)을 갖춘 국가를 의미한다.

신국가주의론(neo-statism)은 발전국가론이나, 신자유주의국가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모델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국가가 강력한 <협상적 권력>을 갖출 때 새로운 발전을 추동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신국가주의론은 국가-시장관계에서 유추된 이론이지만 중앙정부-지방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자립적 지방화 전략이 전제하고 있는 분권/분산/분업형 국가모델의 정립이 성공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방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며 어떻게 지방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을 듯싶다.

19) 아래 내용은 김영정(2009) 44-50쪽을 재정리한 것임을 밝힘.

5) 이론 및 방법론적 문제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성찰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연구자들의 이론적 편협성’에 대한 문제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20년간 지역연구는 구조주의 맑시스트 이론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았다. 정근식과 이준식(1995)은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조주의 관점은 확실히 우리의 현실과 높은 친화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역연구의 종다양화를 가로막았던 원인으로 작동했던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지역연구의 다양성과 내용의 구체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이론적 편향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지역문제에 관한 실천이론가(praxis theorists)들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²⁰⁾ 그들은 의식, 정치, 그리고 문화 등이 자본축적의 논리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는 구조주의 맑스주의자들의 결정론적 입장을 비판한다.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사회구조와 인간행위(human agency)의 상보적 관계이다. 그들은 인간의 의식과 존재가 사회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결정론적 입장을 반대하고, 사회구조가 인간의 의식과 실천의 결과이자 동시에 통로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구조는 유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고, 인간의 행위를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방향을 잡아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의식, 정치, 문화는 자본주의 구조의 부수적 요인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를 구성(재구성)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M.P.Smith and R.Tardanico, 1987, 89-90). 궁극적으로 실천이론은 지역문제를 포함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문제는 그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의식적 관행을 반영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정치사회학적(특히 지역레짐분석) 시각, 문화사회학적 시각, 그리고 지역사회심리학적 입장에서 지역문제를 간과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향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레짐이론에 대한 관심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의 고도화와 공고화를 염원하는 것은 이웃과는 다른 ‘우리 지역’의 형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새로운 지역형성 과정의 사례를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레짐이론의 시각이다. 지방정치의 독특한 전개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관점이 그동안의 지역연구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다. 현재와 같은 ‘강한 시장’ 또는 ‘강한 도지사’ 체제가 지배하는 지역에서 이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만(강희경, 2011), 앞으로 지역단위의 시민사회 성장, 그리고 대기업의 국지전략화 등이 진척될 때 지역레짐의 형성은 불가피하고, 그 영향력은 커질 것이 확실하다. 기존의 장소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도 현재 전주시가 온 힘을 바쳐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탄소산업) 성장전략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정치적 레짐 현상을 사례 분석한 이경은(2011)의 논문이 그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레짐이론은 ‘누가 지역을 지배하느냐?’의 문제를 규명하고자 했던 기존의 정치사회이론들(다윈주의, 엘리트 이론 등)과는 달리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 목적을 성취할 능력 또는 통치능력을 획득하느냐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레짐이론은 ‘무

20) 실천이론가들은 지역 및 도시문제를 계급과 자본축적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구조주의 맑스주의자들의 시각을 비판한다. 대표적인 실천이론가는 M.Castells과 M.P.Smith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구조주의 맑시스트로 출발한 까스텔의 변신은 매우 흥미롭다.

에 대한 권력'(power over)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할 능력'(power to)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이며, 더불어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보다는 사회적 생산(social production)을 성취할 조건을 탐색하는 이론(유재원, 2000 : 29)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도입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지역형성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관점임이 틀림없다.

지역연구에 있어서 이론적 지향의 편향성으로부터 비롯된 연구내용의 <구체성 결여> 문제는 방법론적 경직성과도 관련이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이차적 자료(특히 정부자료)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내기는 쉽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의 연구는 현지관찰이나 비교사회학적 방법을 활용한 사례연구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²¹⁾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서 예시한 것처럼, 괄목할 만한 사례연구들이 착착 쌓여 가고 있다.

5. 요약 및 결론

지난 20년간의 지역연구 동향을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몇 가지 의미 있는 특징이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지역연구 분야인 'region 연구'(가치중립적인 지역연구) 영역의 주제가 기존의 농촌/도시사회학의 관심 영역을 넘어 크게 확장되고 있다. 이것은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 변화의 큰 흐름을 반영하는 정보화, 시민사회, NGO, 자원봉사,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 로컬푸드 등의 문제들이 지역차원에서 논의되고, 분석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당위적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뚜렷한 동향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region 연구 관점'에서 'local 및 space 연구 관점'(지방 및 공간사회학적 관점)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이미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도 정착이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하고 모순적인 지역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지방학자들에게 그 실상을 고발하고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과 프레임이 필요했던 현실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특히 후자의 관점에 근거한 규범적 연구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참여정부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고, 뒤이어 MB정부, 그리고 현 정부까지도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다룰 수밖에 없는 지방 대 중앙의 대결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정책 친화적 관점이 활황을 누렸던 덕분이다.

정부의 정책과제(특히 중앙정부의 국정과제)는 학계의 규범적 연구를 양산시킬 수밖에 없다. 지나간 정부들의 경험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NGO, 여성, 다문화, 녹색성장, 광역권개발 등의 이슈가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을 때마다 예외 없이 관련 분야의 규범적 연구들이 봇물처럼 쏟아졌었다.

정책적-규범적 연구의 양산은 전통적인 사회학적 지역연구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변화하는 '지역',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 위기 때문에 비

21) 지역연구의 위대한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Hunter의 <Community Power Structure(1953)>는 애틀란트 사례연구였고, Dahl의 <Who Governs?(1961)>는 New Heaven 사례연구였다. Lynd 부부의 <Middle Town>은 미 중부의 소도시 사례연구였고, Gans의 <Urban Villagers>는 보스턴 사례연구였다. 고전적 연구뿐만 아니라 현대의 고전으로 각광받는 사례연구 또한 많다. 휴스톤시의 성장과정을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한 바 있는 Joe Feagin의 <Free Enterprise City>, 역시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필라델피아시의 도시발전과정을 분석한 Carolyn T. Adams의 <The Politics of Capital Investment : The Case of Philadelphia>,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의 델리(Delhi) 시를 중심으로 식민지 도시발전 과정과 특징을 밝힌 Anthony D. King의 <The Colonial Urban Development> 등이 그 예들이다.

롯된 현상이기도 하다. 이동과 교류의 일상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광역화, 그리고 비슷한 생활양식의 공간적 확산 등으로 오늘날 지역의 정체성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고, 그 결과 지역연구의 정체성도 미망에 빠져 든 것이다. 단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인정되고, 확인될 뿐, 그 밖의 지방과 지방, 농촌과 농촌,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의 차이가 경험적으로 두드러지게 확인되질 않는다. 삶의 물리적 환경과 경관마저도 급속히 동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30년 전에도 똑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연구의 정체성 위기를 걱정했었다. 1980년대 초반 권태환(1984, 3-4)은 도시적 생활의 확산과 획일화는 ‘공간으로서의 도시’의 제반 현상들을 ‘도시사회’의 속성으로서 보기 보다는 산업사회와 대중사회의 속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음을 주장하며 도시사회학이 ‘도시적’인 실제의 연구대상을 갖기 어렵고, ‘도시적’인 이론적 대상도 갖기 어렵다고 심각하게 걱정했었다. 왕인근(1984, 41-42) 또한 당시에 이미 ‘탈농업적, 탈농민적, 탈농촌적’ 사회발전이 진전되면서 ‘농촌’은 점차 실종되어가고 있고, 따라서 ‘새로운 농촌사회학’이 탄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업사회학, 자연자원의 사회학, 개발사회학 등 대안적 관점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위기의 본질은 마찬가지로 아닌가!

시기와 시대를 가로질러 항용 나타나는 정체 위기를 넘어 지역연구가 나름의 위상을 확립하는 길은 없을까? 아마도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지역의 내부 문제로 시야를 돌려 ‘현장문제’ 중심의 사례연구를 활성화하는 길일 것이다. 권태환(1984)도 도시내 부문들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정체 위기 극복의 길임을 암시하고 있고, 이은진(2009) 역시 지역이 하나의 구조적 권력관계로 배태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례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는 것은 지역연구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해 주는 고무적인 일이다.

지역연구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성찰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연구자들의 편협한 이론적 지향성’에 대한 문제이다. 지난 20년간 지역연구는 구조주의 맑시스트 이론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았다. 그 이전 10여 년 동안에도 마찬가지였다(정근식·이준식, 1995). 30년 변하지 않는 지역학자들의 정치경제학적 전망에 대한 사랑! 참 지독하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현실과 높은 친화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연구의 종다양화를 가로막았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정하기 어렵다. 앞으로 지역연구의 다양성과 내용의 구체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이론적 편향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지역문제에 관한 실천이론가(praxis theorists)들의 다양한 관점들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훨씬 적극적인 방법은 각각의 지역(지방)이 특색 있고, 특화된 지역으로 발전하여 나름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길이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동의한다면, 지역연구자들은 의당 지방자치에 대한 실천적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의 목표가 바로 특색 있는 지역 만들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은 지방사회에 “프라이비티즘”(privatism)이라 개념화되는 ‘개인과 패거리 이익중심주의’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 지역의 도약과 발전을 위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역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모순된 결과인 ‘자치의 패러독스’를 가져왔다. 제도 도입의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 도입 이후의 정책자원의 생산과 분배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제도 도입과 더불어 변화된 지역주민들의 정체성의 혼돈이 그러

한 현상을 보다 심화시켰다. 최근 들어 제도 도입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내부갈등과 혼돈상황에 대한 분석적 연구들이 쌓여 가고 있음이 미래의 지역연구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정책관련 연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를 진지하게 경청해야 하지만, 모든 정책은 당대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역연구의 의미 있는 의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지역연구는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암시해야 하고, 보다 나은 미래의 지역발전 모습이 무언가를 제시해야하는 실천적 목표를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사회학자들은 미래의 삶과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적-규범적 연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당대에 필요한 정책의 내용, 진행되고 있는 정책 평가, 미래 정책의 방향, 그리고 국가와 지방의 관계 등의 실천 과제에 대한 연구가 보다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강신표, 1999. “한국사회학 토착화의 길을 찾아서: 지역사회학의 방향”, 『지역사회학』 창간호, 한울
- 강희경, 2001. “투표행위로 본 충북의 지역정체성” 『지역사회학』 3권 1호.
- 강희경, 2010. “지역사회의 재구조화 : 지역개발과 공동체”. 지역사회학회 2010 춘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강희경, 2011. “개발정치의 과잉과 미약한 시민사회_청주시의 경우” 『지역사회학』 13권 1호.
- 강희경, 민경희, 1998. “지역사회 권력자의 권력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32-겨울호.
- 고현웅, 2005. “주요국 비정규 주민정책 비교” 『지역사회학』 6권 2호.
- 권태환, 1984. “한국사회학에 있어서의 도시연구”. 한국사회학 제18집, 한국사회학회.
- 김성기·유리 역, 2010. <키워드>, 민음사 / Raymond Williams, Keywords :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1983. HarperCollins. .
- 김성배, 2008. “수도권 규제의 실상과 해소과제”, 자유기업원 리포트(2008.9).
- 김신열, 2005. “한국과 미국의 지역사회 민간복지기관의 거버넌스 비교” 『지역사회학』 7권 1호.
- 김영래, 2005.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간의 뉴거버넌스 관계 연구” 『지역사회학』 7권 1호.
- 김영범, 이기원, 안동규, 2010. “자발적 결사체 참여와 지역 사회자본” 『지역사회학』 12권 1호.
- 김영정, 박준식, 송미령, 모성은, 김현호, 2007. <신활력사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김영정, 이경은, 2012. “유역공동체 조성사업과 환경정치-‘만경강 살리기 사업’의 사례: 레짐 vs 거버넌스” 『지역사회학』 14권 1호.
- 김영정, 1993. “한국 도시지역 경제성장의 영향요인 분석 : 1968-1985년”, 한국사회학 제26집, 한국사회학회.
- 김영정, 2000. “지역정보화와 지역발전의 관계” 『지역사회학』 2권 1호.
- 김영정, 2001. “지역NGO실태와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학』3권 1호.
- 김영정, 2003. “지역발전과 성장정치” 『지역사회학』 4권 2호.
- 김영정, 2004. “지역발전의 기대유형과 지역 NGO의 대응-전북지역 사례” 『지역사회학』 5권 2호.
- 김영정, 2008a. “지역거버넌스와 공동체 운동” 『지역사회학』 9권 2호.
- 김영정, 2008b. “상향식 지역발전정책의 성공조건과 과제” 『지역사회학』 10권 1호.
- 김영정, 2009. “한국의 지역불균등_1960-2005년” 『지역사회학』 11권 1호.
- 김영정, 2011. “한국사회의 지방화 논쟁_보수의 한계, 진보의 성찰” 『지역사회학』 13권 1호.
- 김영정, 2012. “신산업의 지역불균등 발전과 경로의존 경향: 1990-2010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통합방안 연구보고서>, 사회통합위원회.
- 김원동, 2000.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한 지역정보화” 『지역사회학』 2권 1호.
- 김원동, 2012. “강원도민의 투표행위와 정치의식_4/27도지사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3권 2호.
- 김종덕, 2002. “패스트푸드의 세계화와 슬로우푸드 운동” 『지역사회학』 4권 1호.
- 김종덕, 2003. “아시아 식량문제와 비정부 기구의 대응” 『지역사회학』 4권 2호.
- 김종덕, 2008. “우리나라 로컬푸드 정책의 방향” 『지역사회학』 9권 2호.
- 김종덕, 2009. “천안의 지산지소 운동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학』 10권 2호.

- 김종덕. 2010. “먹거리의 탈정치화와 대응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학』 12권 1호.
- 김철규, 김진영, 김상숙. 2012. “대안 먹거리 운동과 한국의 생협-한살림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4권 1호.
- 김철효, 설동훈, 홍승권. 2006. “인권으로서의 이주노동자 건강권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학』 7권 2호.
- 김태란, 인태정. 2009. “부산지역의 마을만들기 유형과 특성” 『지역사회학』 11권 1호.
- 김홍주, 이현진, 김철규. 2013. “생협운동의 변화와 생협복지주의-울림두레생협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5권 1호.
- 김홍주. 2011. “한국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 만들기” 『지역사회학』 12권 2호.
- 노병일, 김세원. 2003.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자원봉사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학』 5권 1호.
- 박재욱. 1999. “대기업 도시 울산시와 도요타시의 기업권력과 지방정치 : 한일간 자동차 생산도시의 비교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15(1)(봄/여름) : 97~130.
- 박준식, 김영범. 2013. “지역격차 문제의 인식 지형과 변화의 전망:영호남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균열로” 『지역사회학』 14권 2호.
- 박준식, 정동일, 성경룡. 2009. “지역 낙후성의 구조와 전환을 바라보는 이론적 접근”, 『지역사회학』 10권 2호.
- 박창호 역. 2011. <사회학적으로 생각하기>. 서울경제경영/ Zygmunt Bauman and Tim May, Thinking Sociologically, 2001.
- 백두주. 2001. “부산지역 성장정치에 관한 사례연구: 삼성자동차 부산유치 및 매각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14. 경남대 사회학과.
- 변용환, 류중현, 전태영. 2011.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관찰과 함의” 『지역사회학』 13권 1호.
- 석현호. 1997.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나남.
- 설동훈, 이계승. 2011.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이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지역사회학』 13권 1호.
- 설동훈, 임경택. 2004.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지역사회학』 5권 2호.
- 설동훈, 임경택. 2006. “일본의 국제결혼 중개업체 관리체계” 『지역사회학』 8권 1호.
- 설동훈. 2002. “세계도시와 문화적 다양성” 『지역사회학』 4권 1호.
- 설동훈. 2003. “대만의 외국인력 정책” 『지역사회학』 4권 2호.
- 설동훈. 2003.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혁, 2003년” 『지역사회학』 5권 1호.
- 설동훈. 2013. “중소기업관리자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분석” 『지역사회학』 14권 2호.
- 성경룡. 2013. “지역불평등의 정치동학과 지역정책 분석: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 『지역사회학』 14권 2호.
- 성경룡, 박준식. 2013. “지역경제의 위기와 창조적 균형발전 전략의 모색” 『지역사회학』 15권 1호.
- 신도철. 2010. “보수의 시각에서 본 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 사회통합위원회 주최 '21세기 국가전략과 사회통합' 세미나 발표논문(2010.7)
- 염미경, 김규리. 2008. “제주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이주, 딜레마와 적응” 『지역사회학』 9권 2호.
- 염미경, 한석지. 2004. “농촌개발과 지역거버넌스” 『지역사회학』 5권 2호.
- 염미경. 2000. “도시지역의 활성화와 정체성 정치: 일본 미이라쿠의 역사마을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34-가을호.
- 염미경. 2005. “지역혁신체계 구축 현황과 문제점” 『지역사회학』 6권 2호.
- 염미경. 2008. “산업유산과 도시만들기” 『지역사회학』 10권 1호.
- 염미경. 2010. “근대 산업유산의 활용과 지역활성화” 『지역사회학』 12권 1호.
- 염미경. 2011. “제주웅기의 문화유산 만들기 과정과 이해갈등” 『지역사회학』 12권 2호.
- 왕인근. 1984. “농촌사회학연구의 40년사”, 한국사회학 제18집, 한국사회학회.
- 유광무. 2011. “현대 미국 시민사회의 갈등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학』 12권 2호.
- 유재원. 2000. “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구조 : 청주시 사례”. 박종민(편). 『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구조』. 나남출판.
- 윤일성. 2012. “해운대 관광지조트의 도시정치학_탐욕과 불의의 도시개발” 『지역사회학』 13권 2호.
- 윤일성. 2013. “부산 북항재개발의 쟁점들-토건사업인가 시민을 위한 사업인가?” 『지역사회학』 15권 1호.
- 이강익. 2011. “부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불균등발전” 『지역사회학』 13권 1호.
- 이경은. 2011. “지역 도시레짐의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 이기흥. 2005. “혁신클러스터 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OCSN 모델의 제안” 『지역사회학』 7권 1호.
- 이수철. 2011. “지역 시민사회의 연대와 갈등-‘성남시립병원 건립 조례제정 운동’의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2권 2호.
- 이승협. 2012. “19대 총선을 통해 본 대구·경북의 지역주의와 권력의 물질성” 『지역사회학』 14권 1호.

- 이시화. 2000. “경남지역정보화의 자리매김” 『지역사회학』 2권 1호.
- 이예란, 김영기. 2004. “사회적 자본과 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질-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사례연구” 『지역사회학』 6권 1호.
- 이용숙. 2003. “지역혁신체제론의 비판적 재검토: 무엇을, 누구를 위한 지역혁신체제인가”, <동향과 전망> 59.
- 이은진, 1999. “지역사회학 역사” 『지역사회학』 창간호.
- 이은진. 1999. “지역사회학연구의 현황과 쟁점” 『지역사회학』 창간호.
- 이은진. 2006. “마을만들기 운동의 현황과 과제” 『지역사회학』 8권 1호.
- 이은진. 2009. “사회적 연구에서 지역의 위치” 『지역사회학』 10권 2호.
- 이재열. 2003. “사회적 자본과 시민의식-서울시와 자치구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주는 함의” 『지역사회학』 5권 1호.
- 이재열. 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학』 8권 1호.
- 이종열. 1998. “도시정치권력이론의 비교론적 고찰: 레짐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1(1).
- 이혜진, 이원식, 김홍주. 2012. “로컬푸드와 지역운동네트워크의 발전_원주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3권 2호.
- 이혜진. 2007. “지역개발과 주민운동의 정치과정 연구 : 강원도 고한.사북 지역의 지역개발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경택, 설동훈. 2006. “일본의 결혼이민자 복지정책” 『지역사회학』 7권 2호.
- 장세훈. 2012. “도시 재개발의 정치사회학_부산시의 불량주택 재개발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3권 2호.
- 장원호. 2000. “서울시 지방전자정부 구현실태” 『지역사회학』 2권 1호.
- 정근식, 이준식. 1995. “해방이후 지역간 불균등발전과 지역갈등의 전개: 연구사와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및 한국사회사학회. 『해방후 한국의 구조적 변동과 사회발전』, 광복 5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 논문.
- 정동일, 허목화. 2010. “낙후지역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의 전략과 그 함의” 『지역사회학』 12권 1호.
- 정동일, 성경룡. 2010. “창조적 지역발전과 그룹 지니어스: 신활력사업 대상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4집 1호.
- 정준호, 2013. “영국 지역정책 거버넌스의 변화”, <지역과 발전> 봄호, 지역발전위원회
- 정태식. 2013. “독일과 한국에서 핵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국가-시민사회 관계 비교와 전문성 정치의 함의” 『지역사회학』 15권 1호.
- 조주은. 2003. “정보격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학』 4권 2호.
- 조주은. 2004. “정보격차의 기술적 요인-한국과 미국의 보편적 관계” 『지역사회학』 6권 1호.
- 지역사회학회, 1993-2002. 각년도 정기 학술대회 발표논문 자료집.
- 한림대 사회과학연구소, 1991. 『춘천리포트』, 나남.
- 한상진. 1999.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와 지방정치”. 한상진 저. 『도시와 공동체(한울)』 제8장.
- Gottdiener, M. and Joe R. Feagin, 1988. "The Paradigm Shift in Urban Sociology",
Urban Affairs Quarterly, Vol 24, No.2 : 163-187.
- Smith, M. P. and R. Tardano, 1987. "Urban Theory Reconsidered : Production,
Reproduction and Collective Action," in M.P. Smith and J.R. Feagin (ed), The
Capitalist City: Global Restructuring and Community Politics, Basil Blackwell, 1987.
- Warner, Sam Bass; 1968. The Private City: Philadelphia in Three Periods of Its Growth, Univ. of Pennsylvania Press.)
- Weiss, L. and Hobson, J. 1995. States and Economics Development: A Comparative Historical Analysis. Cambridge, Plity Press.